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약자 보호입니다.

- 일한만큼 정당보상... 체불, 공짜야근 근절 등 개혁과제 의견 수렴
- 국민과 근로감독관이 약자가 보호받는 현재와 미래의 노동을 말하다

고용노동부는 5월 16일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2차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위원 38명으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구성하였고 이날 1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등 노동시장 약자 보호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위원들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약자 보호 정책이야말로 노동개혁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용자 등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중소기업, 편의점 등 취약분야 보호 강화, ▲일자리 변동에 따른 사용자·근로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이정식 장관과 정책담당 국장, MZ세대 근로감독관들이 참여하여 위원들과 소통하였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약자 보호에 힘쓰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약정 OT를 초과하는 근무시간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시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미기재 등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감독, 시정 등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개선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변화는 노동시장 약자들에게 더욱 혹독하다”면서, “노동시장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핵심적인 과제이자 목적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여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노동개혁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수진 (044-202-7740)
	노동개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화 (044-202-7744)

☐ **일시/장소**

- '23. 5. 16. (화) 14:00 ~ 16:00, 서울 신논현역 앙트레블

☐ **참석자**

- (정부) 장관, 노동개혁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MZ 근로감독관 등
- (포럼) 위원 17명

☐ **행사 내용(안) ※ 전체 언론 공개**

- 포럼위원이 자유롭게 의견 발표
- 담당 국장·근로감독관(MZ)들이 이에 대해 답변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4:00 ~ 14:05('05)	· 참석자 소개	사회자: 청년보좌역
14:05 ~ 14:20('15)	· 장관 인사 말씀	
14:20 ~ 15:55('95)	· 포럼 위원 자유 토론	
15:55 ~ 16:00('05)	· 장관 마무리 말씀	

- 「노동의 미래 포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완연한 봄이 시작되던 춘분(春分)에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 뵈었는데, 어느덧 다음 주면 만물이 더욱 생장하는 소만(小滿)으로 여름의 문턱이 시작된다고 하니 새삼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끼며 우리 노동시장도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 최근 우리 사회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 대·중소기업, 원·하청 격차 문제와 함께 저출생·고령화,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전통적인 노동의 모습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 안타깝게 그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두렵게 보호받는 근로자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시장 약자들에게 더욱 혹독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의식과 규범, 관행 등은 과거의 모습 그대로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진정한 약자보호와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지난 1년간 이번이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함을 가지고 노동개혁 추진에 온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 우선 개혁의 출발점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였습니다.
- 노동조합이 그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노동조합에 재정 관련 서류의 비치, 보존 여부를 자율 점검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하였고 미이행 노조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 현재 대상 노조의 87.4%가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 세습 등 불법 단협에 대한 시정조치를 추진하고, 공정채용법의 개정도 적극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경사노위 논의 등을 바탕으로 70년 전 공장법 시대의 낡은 노동법·제도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 제도는 기존의 개선 방향으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을 목표로 하면서 대국민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약자 보호는 강화하고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 오늘의 포럼 주제이기도 한 “약자보호”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서 그 무엇보다 핵심적인 과제이자 목적입니다.
- 노동개혁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활력넘치는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난 1년간 미조직 근로자, 비정규직, 청년 등 노동시장의 약자도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짜야근과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특히 임금체불액이 연간 1조가 넘고, 70% 이상의 임금체불이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취약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상황에서 경제적 제재 강화 및 자발적 청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임금체계인 연공급 체계 하에서 성과와 보상이 공정하게 연계되고 있지 못합니다.
- 이에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임금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역대 처음으로 조선업 분야에서 원·하청, 정부 등 3자 협력모델을 마련하여 지난 2월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업종에서 스스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상생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 정부는 그간 노동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왔습니다.

- 앞으로도 더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더욱 많이 소통하고자 하며,
- 노동의 미래 포럼이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바라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 노동약자 보호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노동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다만, 그 방식에 있어 일각에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와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야하는 정부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개정안은 조직화 된 소수(14.2%)의 기득권만을 강화하여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 대신, 정부는 지난 1년간 마련된 노동개혁의 기틀을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제 보완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겠습니다.
- 상반기 내 노동·산업·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 등 정책적 노력과 법·제도 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근로자 모두를 위한 이중구조 완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 정부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해 추진 해온 상습체불·공짜야근 근절 등 다양한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생생한 의견과 추가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정책들을 가감 없이 말씀해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